

이명박정권의 반통일정책과 코리아반도의 정세변화

황혜로 | 21세기코리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차례>

1. 대북정책에서 이명박정권의 본질적 특징
2. 조선과 미국 사이의 정세에서 근본적인 변화 조짐
3. 이명박정권의 실정(失政)과 반MB운동
4. 이명박정권에게 치명적인 5가지 모순
5. 북코리아의 주동적인 공세와 이명박정권의 불가피한 정책전환

1. 대북정책에서 이명박정권의 본질적 특징

이명박정권은 남코리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의 정권이면서도 그 정당안의 가장 극우적인 세력의 정권이다. 그런 극우적 성격에 맞게 이명박정권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친미, 친일의 매국배족적이고 남코리아민중에게는 반민주적 탄압과 반민중적 정책을 펼치며 특히 북코리아와의 관계에서는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대북정책에서 이명박정권의 본질적 특징, 곧 역대 정권들과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전임정권들의 남북합의를 모두 파괴하였다는 점이다.¹⁾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반복정권과 그

1) 6.15와 10.4 선언을 존중해야 한다. 6.15정신은 상호존중이다. 흡수통일론을 주장한다면, 화해는 불가능하다. 6.15정신은 호혜적 협력이다. 남과 북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겠는가? 10.4선언에 대한 존중은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지름길이다. 10.4선언 중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실무협회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업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전환을 촉구한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2009년 정기공동대표회의 특별결의문, 2009.2.17)

이명박일당이 우리의 중대조치가 마치도 북남합의에 배치되는 것처럼 떠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집권하기 바쁘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고 그 이행을 공공연히 거부해 나선 자들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합의사항에 배치’니 뭐니 하고 뻔뻔스럽게 떠들어대는가. 북남공동선언들을 ‘배타적’이니, ‘대남전략의 산물’이니 뭐니 하고 헐뜯으면서 그에 완전히 배치되는 반민중적인 ‘비핵, 개방, 3000’을 들고 나오고 이제는 거기에서 ‘상생, 공영’이라는 허울을 씌워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광고하며 이미 이룩된 북남합의들을 짓밟고 있는 장본인은 또 누구인가. 그들이 대화일방인 우리를 해치기 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의 도수를 무한정 높이고 있는 그 자체가 역사적인 두 선언들에 대한 위반이고 모든 북남합의들에 배치되는 범죄행위이다. (「로동신문」,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조선신보, 2008.12.1)

매국역적 이명박패당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북과 남 사이에 이룩된 모든 합의들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렸으며 북남관계를 전쟁접경의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조국전선 2009.2.24,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의 진행, 제12기 대의원선거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조선신보, 2009.2.25)

북의 일관된 메시지를 무시한 것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다. 물론 이명박정부도 말로는 6.15공동선언과 10.4평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연북정권의 역사에서 이명박정권은 특수하다. 구체적으로 김대중정권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정권의 10.4선언이라는 남북합의를 부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로 되돌려놓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직전대통령인 노무현의 자결과 전전대통령인 김대중의 서거라는 전례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고 민중의 반MB정서와 북코리아의 대남정책도 모두 MB정권퇴진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자주, 평화, 통일의 선언인 만큼 이를 파기하였다는 것은 이명박정권이 사대, 전쟁, 분단의 방향으로 민족과 역사에 반대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상봉의 부정, 개성공단과 남북경제협력의 부정, 서해평화지대의 부정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전쟁전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전정권들과 남북민중이 어렵게 이루어놓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성과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서해상과 38선에서 언제 전투가 벌어지고 불상사가 발생할지 모르는 극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특히 이명박정권은 ‘안보사범100일수사계획’²⁾이라는 이름아래 전임정권들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통일운동, 남북교류를 하였던 단체와 인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걸어 구속하는 파쇼적 탄압마저 자행하였다. 한나라당내에서도 가장 극단적 반북세력인 뉴라이트(실제로는 극우)³⁾세력에 기반해 집권하고 그 핵심인사들을 한나라당과 국회, 정권에 포시시킨 이명박정권은 친미친일사대, 대북적대, 파쇼공안의 정책과 식민사관으로 무장하고 있어 갈수록 위협성을 더해가고 있다.

2. 조선과 미국 사이의 정세에서 근본적인 변화 조짐

변영선언을 존중하고 이행에 대해 만나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이대통령은 방미중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최후의 궁극목표라며 공공연히 흡수통일을 주장하였다. 과연 누가 예측하기 어려운 정권인가? 또 박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개성공단문제도 다 합의해놓은 걸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무슨 상호신뢰를 하겠느냐.”고. 말이야 바른 말이다. 다 합의해 놓은 것을 깨면 안된다. 그런데 박대표가 잊고 있는 게 있다. 개성공단은 6.15공동선언이 낳은 옥동자이다. 6.15공동선언 4항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만든 공동공간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인력수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기사사건립을 남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현재 남과 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길을 닦은 문서이자 남과 북의 최고당국자가 합의하고 국제사회가 보증한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변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거부하면서 북에게 합의 위반과 신뢰파기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닌가? (「“굴복 강요한 대북정책, MB의 자승자박”」, 평화뉴스, 2008.11.25)

2) 경찰정보안국은 26일 지난 4월2일 ‘안보위해사범100일수사계획’을 세워 다음달 10일까지 국가보안법위반사례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안경찰업무평가 때 안보위해사범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거실적늘리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보안사범검거건수는 2007년 39건, 2008년 40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3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보안전문경찰에게 주특기를 부여하는 제도인 보안경과제도 되살렸다. 이 제도는 1999년 이후 10년동안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경찰 ‘보안경관’ 부활 공안통치 강화」, 경향신문, 2009.6.26)

3) “내일이 64주년 맞는 광복절인데 이명박정권은 출범부터 줄기차게 수구보수 뉴라이트와 밀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역사 왜곡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다”, “뉴라이트인사가 대거 정관계에 진출, 한나라당 국회의원, 청와대와 각 위원회, 정부산하기관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 “친일수구 뉴라이트의 주장과 정부여당의 정책이 거의 동일”, “뉴라이트가 주장하면 정부여당이 실행에 옮기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언론악법과 언론장악 그리고 친일 극우의 역사오식, 반민주적인 행태들 그리고 대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뉴라이트정부’」, 프로그래시브, 2009.8.15 / 「뉴라이트와 정부·여당과의 유착」, 민주당, 2009.8.14)

조선은 2009년 들어 '2012년강성대국건설'이라는 국가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조선내에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150일전투'로 다그치는 한편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미 군사적 공세를 퍼부었다.⁴⁾ 4월에는 '은하2호'라는 우주발사체(다른 의미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어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는가 하면 5월에는 2차 핵시험을 하고 7월에는 11발의 단·중·장거리미사일발사훈련을 벌였다.⁵⁾ 이와 같은 강력하고 집중적이며 연속적인

4) 오늘 우리는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중대한 역사적 계선에 서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은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당과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계승하며 선군 조선의 국력을 최성기에 올려세워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더없이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승리의 신심 드높이 오늘의 총공격전에 박차를 가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사회주의조국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아야 한다.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공동사설, 2009.1.1)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따라 150일전투를 힘차게 벌려온 지난 100일간은 우리 당의 결심이 어떤 기적적인 현실을 낳는가를 세계앞에 보여주었다. 150일전투의 불길속에 영웅적 위훈을 창조하여온 지난 100일간은 전인민적인 총공세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긴 보람찬 100일이며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압력과 봉쇄책동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자주적 길을 따라 확신성 있게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긍지 높은 100일이었다. 역사적인 150일전투를 발기하시여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고 도처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경이적인 사변들과 기적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초소들에서 지난 100일동안에 이룩한 승리와 성과, 기적과 위훈은 실로 자랑할 만한 것이다. 150일전투기간 소문을 낸 단위들 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영웅광산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기업소도 있고 강성대국건설의 전초병, 자력갱생의 본보기단위라고 내세워주신 기업소도 있으며 상반년안에 벌써 연간계획을 초과완수한 수많은 혁신자, 위훈자들을 배출한 공장들도 있다. 현실은 천만군민을 15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가 얼마나 정당하며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환의 해, 변이 나는 해로 되게 할 데 대한 당의 결심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어떤 비상한 정신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당의 결심이자 우리 인민의 지향이고 의지이며 승리의 포대이다 ...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결정적인 승리의 해로 빛내일 확고한 결심을 지니시고 전당, 전국, 전민을 150일전투에로 불러일으킨 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온 나라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면서 초강도의 강행군으로 오늘의 총공격전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분도 장군님이시다.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올 비상한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끝없는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전체 인민의 정신력이 활화산처럼 분출되었고 새로운 대고조진군속도가 창조되게 되었으며 150일전투의 하루하루가 영웅적 위훈으로 수놓아지게 되었다. (「노동신문」,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150일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내달리자」, 조선신보, 2009.7.29)

5) 북측의 위성발사가 성공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미국 군부는 북측이 위성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실패설을 날조, 유포하고 있다. 1998년 8월 31일에 북측이 쏘아올린 '백두산1호'가 '광명성1호'를 저궤도에 진입시키자, '백두산1호'의 3단추진체가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떨어지다가 대기 중에서 타버렸다는 실패설을 퍼뜨렸고, 2006년 7월 5일 새벽에 북측이 야간 미사일발사훈련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여 미국군의 허를 찌르자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부러졌다는 실패설을 퍼뜨렸고, 이번에는 '은하2호'의 3단추진체가 우주를 잠시 비행하다가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실패설을 퍼뜨렸다. 그러나 2009년 4월 5일 북측이 쏘아올린 위성발사체 '은하2호'는 예정된 대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저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 안착시켰다. '광명성2호'의 궤도진입은 1998년 8월 31일 북측이 쏘아올린 위성발사체 '백두산1호'가 북측의 첫 인공위성 '광명성1호'를 저궤도에 진입시킨 이래 11년만에 두번째로 이루어낸 성과다. 미국 군부는 '광명성2호'가 성공적으로 저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였으면서도, 미리 준비해둔 실패설을 꺼내놓았다. 세계각국의 친미 정부들만이 미국 군부가 퍼뜨린 실패설을 받아들였고, 친미언론들만이 그 실패설을 보도하였다. (「'광명성2호'와 반체군사전선」, 한호석, 2009.4.25)

조선은 이번 발사를 통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유사시 대응군사력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기술들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조선이 '백두산2호'가 아니라 '은하2호'라고 명명한 우주발사체는 응당 '백두산'계열과 다른 '은하'계열로서의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듯이 미국, 러시아를 비롯 모든 나라들이 당일 '11시20분'에 '은하2호'가 발사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11시30분'에 다른 곳에서 발사된 발사체만 추적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조선의 '은하'계열 발사체에 추적을 피하는 스텔스기능이 장착되었다는 것과 다른 곳에서의 발사가 바로 핵잠수함에서 비롯되었다는 등 군사전과 심리전에서 미국을 압도하는 여러 가설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기에 중요하다.

군사적 공세는 조선과 미국과의 대결전을 결정짓고 기어이 2012년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조선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다. 결국 조미관계가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조선에서의 경제건설도 조국의 평화통일도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도 불가능하다고 조선이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군사적 공세에 미국이 취한 것은 결국 클린턴의 방조(訪朝) 등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표명이다. 해상봉쇄와 유엔제재를 운운했으나 실제로는 말에 불과하였으므로 조선은 사실상 군사, 외교, 경제적 타격을 거의 입지 않았다.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마음대로 하며 미국의 핵, 미사일 국제통제시스템을 결정적으로 교란하고 있는데도 미국이 실효 있는 압박과 제재를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조미대결전이 조선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미국은 자신의 국제적 압박과 제재, 6자회담방법에 대한 주장을 접고 전대통령인 클린턴을 방조시켰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올해 안에 현대통령인 오바마의 방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⁶⁾

클린턴의 방조가 단순히 두 여기자의 석방건만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조선과 미국간의 군사, 정치, 경제적 현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며 조미관계에서 전환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클린턴이라는 전직대통령의 방조와 그 수행원들의 면면, 클린턴과 오바마의 상황실, 집무실에서 1시간 넘는 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미국이 조선과의 관계를 과거 클린턴정권시절 1994년과 2000년에 합의했던 사항대로 적대정책을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하는 방법 외에 조선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정책전환의 시기와 오바마의 방조 등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뿐이다.

또한 ‘은하1호’라는 다른 발사체를 대기시켜 놓고 미국 등의 반응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을 시위하며 미국을 결정적으로 압박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도 보여준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직접 총지휘한 이번 발사를 둘러싼 대미 군사력의 시위와 심리전의 전개는 사상 처음 있는 가장 강력한 군사, 정치적 공세로서 오바마대통령을 집권초기부터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며 조미관계를 결정적 국면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인공위성 발사, 조미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 조덕원, 2009.4.25)

전쟁 아니면 통일, 코리아반도 정세의 요점이다. 2009년 올해 조선이 ‘광명성2호’를 발사하고 연이어 핵시험, 단거리 미사일발사시험 등 미국을 압박하는 군사적 총공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미국이 대규모 침략적인 대조선군사훈련을 일본, 남코리야와 함께 벌여도 조선이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공세를 취한 적은 없었다.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목표를 스스로 제시한 조선(북코리야)이 반드시 이를 관철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는 반증이다. 미국, 남코리야와의 관계가 풀리지 않고서는 결코 사회주의강성대국, 통일강성대국의 단계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이 4월 5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5월 25일 핵시험을 단행하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을 무력화시킬 단거리미사일시험들을 무시로 진행하는 상황에 미국은 무척 당황하며 마땅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의 인공위성발사를 두고 미사일발사라고 오판한 미국은 그 치명적인 시간차가 조선의 놀라운 스텔스기술이라는 가설과, 조선의 핵시험을 두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 조선의 놀라운 아메리슘핵폭탄이라는 가설은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더욱이 조선이 예고한대로 이 두가지 공세에 못지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들을 한다면 그 위력은 어떠한 것인지도 전술스럽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구쏘련, 구동독 과학자들을 흡수해 발전시켜온 핵, 미사일 기술이 상상을 초월하는 조건에서 미국이 조선에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무 아니면 전부(Nothing or All)-전쟁과 통일의 기로에 선 코리아반도」, 김민재, 2009.6.13)

6) 2. 클린턴전대통령의 방조목적은 내적으로 오바마현대통령의 방조조건이고 외적으로 두 기자의 석방건이다. 클린턴은 오바마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 사이의 특별한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오바마의 방조를 비롯한 양국관계정상화와 핵미사일해법에 대한 결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이는 과거 카터의 방문경험과 클린턴 일행들의 면면, 클린턴의 귀국 후 태도, 오바마의 기대섞인 논평 등으로 충분히 유추가능하다. 3. 조미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클린턴의 방조로 풀었다면 이후의 결정적인 양자정치회담방식은 오바마의 방조와 일괄타결이 유력하며 시기적으로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회담의 의제로는 조선의 요구사항인 조미수교, 경제봉쇄해제, 주한미군철수 등과 미국의 요구사항인 핵, 미사일의 개발중단과 확산방지 등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조선은 미국에 대조선정책의 전환을, 미국은 조선에 미국의 핵, 미사일 패권체계 유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조미정세의 변화와 진보세력의 과제」, 조덕원, 2009.8.7)

3. 이명박정권의 실정(失政)과 반MB운동

이명박정권은 말로는 ‘친서민’, ‘중도실용’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이어서 부자감세 100조, 4대강살리기사업 30조예산 등 천문학적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데 책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생예산의 대대적인 삭감과 물가폭등, 실업증가의 후과가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범위예안 추진과 공기업선진화정책을 비롯한 정리해고와 경제구조조정과 미디어악법 날치기통과 등 노동자민중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를 연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남코리아에 존재하는 것은 이명박대통령의 1인독재와 반민주반민중정책뿐이고 정책에서의 ‘서민’과 ‘중도’는 완전히 실종되었다.⁷⁾

이명박정권이 등장하면서 친미사대정책과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자 2008년에는 광우병쇠고기수입과 한미FTA를 반대하는 100만 시민, 네티즌이 촛불시위를 벌였으며 2009년에는 노무현전대통령의 서거에 500만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또 교수들로부터 시작된 ‘시국선언’은 교사들로 이어지며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갔으며 2009년 6~8월에는 2차례의 범국민대회를 비롯한 5차례의 대규모 시국대회가 치러졌다. 역대 어떤 군사독재정권, 문민독재정권도 이명박정권처럼 집권 첫째해, 둘째해에 이렇게 대규모적인 정권반대시위에 부딪힌 적은 없었다.

주목되는 것은 남코리아내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의 연대와 활발한 반MB투쟁이다. 민주노동당은 올해 6월에 정책당대회를 열어 이명박정권의 퇴진운동을 천명하고 각계각층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야4당은 상설적인 비상시국회의를 조직하여 반MB투쟁을 계속 강하게 벌여나가고 있다.⁸⁾ 노무현전대통령의 자결과 김대중전대통령의 서거⁹⁾, 그리고 미디어악법날치통과 등을 계기로 국민들의 반MB정서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하반기 정국

7) 도대체 비정규직범위 개악과 최저임금 삭감 시도, 공공요금 인상, 학교 급식비 삭감, 쌍용차 대량해고와 폭력 침탈을 하면서 ‘서민’이라고 떠드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애국가동단의 백색테러와 국정원의 민간사찰,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대량 징계, 공안사범 검거 1백일 작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떠드는 ‘중도’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이처럼 콘크리트 위에 녹색 페인트만 칠하면 ‘녹색성장’이 된다는 식의 사기극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한국사회연구소 조사에서 이명박의 ‘서민행보에 기대된다’는 여론은 30%를 조금 넘었을 뿐이다. 더구나 극우익들은 이런 꼼수조차 “배신이자 기회주의”(김용갑)라고 비난하며 “이명박은 탄핵돼야 한다”(조갑제)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산토끼’는 못 잡으면서 ‘집토끼’들의 불만만 사고 있는 셈이다. 결국 진정한 ‘근원적 처방’은 포장 바꾸기가 아니라 이명박 퇴진이라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이명박의 “중도·서민” 행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레프트21, 2009.7.2)

8) 이명박독재정권이 만들어 낸 민주주의위기, 서민경제위기, 남북관계위기 속에 우리 삶은 끝없이 무너져 간다 ‘온 국민이 이명박대통령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사과도 국정기조 전환도 철저히 거부했다. 이제는 참을 때가 아니다’ ‘이명박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생도, 민주주의도, 남북화해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민심은 독재정권 퇴진을 요구’ ‘이명박독재정권의 퇴진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굽힘없이 싸울 것.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선언문’, 민주노동당, 2009.6.21)

“강고한 반MB 대연합을 통해 독재정권 퇴진의 국민적 요구를 현실로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1987년 6월항쟁이 만들었던 그 날의 정신과 합성을 이어받아 제2의 국본,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 범국민운동본부’ 건설을 제안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 취임1주년기념 기자회견담회’, 민주노동당, 2009.7.27)

우리는 지난 6월9일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 시민사회측 인사들은 야4당대표들에게 향후일정을 감안하여, 제 민주세력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할 것을 권유했다. ... 참석자들은 그밖에도 여러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고, 다시한번 국정운영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야4당대표와 시민사회인사 2차 원탁회의 논의결과’, 민주노동당, 2009.7.14)

민주당 박지원정책위의장, “김대통령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기면서 자신에게 ‘민주당은 정세균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야4당과 단합하고 모든 민주시민사회와 연합해서 반드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문제 위기를 위해 승리하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 (“이명박, 화합 통합 용서 얘기 가증스럽다” 프로그래시브 2009.6.24)

9) 의장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집니다. ‘지금은 민주주체의 시대다. 4.19와 6월민중항쟁을 보라. 민

과 내년 지자체선거국면이 각별히 주목되고 있다.

4. 이명박정권에게 치명적인 5가지 모순

이명박정권은 태생적인 한계와 지난 1년반 임기동안의 정책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5가지 모순에 직면해 있다. 5가지 모순은 진보세력과의 모순, 민주개혁세력과의 모순, 한나라당내 전쟁반대세력과의 모순, 북코리아와의 모순, 미국의 대조선정책과의 모순인데, 이 중 앞의 세 모순은 남코리아내에서의 모순이고 다른 두 개는 각각 북코리아, 미국과의 모순이다.¹⁰⁾

진보세력은 민주노동당의 정책당대회선언과 민주노총, 전농의 선언 등으로 확인되듯이 MB정권퇴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따라서 진보세력과 이명박정권과의 모순은 적대적 모순으로서 진보세력이 이명박정권의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만큼 정권이 퇴진하든 교체되든 존재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한 해소의 방법은 없다. 이는 흡사 마주 달리는 기차들의 충돌과 같아서 모순의 폭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개혁세력은 아직 이명박정권의 퇴진구호를 들지는 않았지만 이명박정권이 빠르게 군사독재정권식으로 과소화되고 있으며 역대 민주개혁정권의 두 대통령이 그 여파로 자결하고 서거한 조건에서 민주개혁세력과 이명박정권과의 모순이 해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현재 민주개혁세력은 진보세력과 반MB전선을 형성하며 장외투쟁과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중간심판을 비롯하여 가능하다면 정권퇴진의 항쟁국면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정권이 설사 대북정책을 전환하더라도 그 태생적 한계와 지난 과정으로 보아 남코리아내 정책을 민주개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만큼 민주개혁세력과 이명박정권이 적대적 관계로 상충발전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인다.

한나라당이라는 수구보수정당은 통일을 반대하면서도 전쟁도 반대하는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다. 통일은 곧 진보와 민주개혁을 촉진하며 반통일세력의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당연히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극단화되어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들의 권력기반과 경제기반을 모두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강력히 반대한다. 이명박정권이 계속해서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며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면 한나라당내, 수구보수세력내 전쟁반대세력과의 모순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현상은 이명박정권이 4대강개발사업에 30조예산을 책정하며 그 이권다툼이 본격화되고 개헌, 선거법개정의 정쟁국면과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내부

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잡을 주체가 없다. 제2의 6월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 이렇게 가슴 떨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숨으로 민중을 깨우치고 목숨으로 민주주의 적, 자주통일의 적을 전율시킨 심장의 외침! 그렇습니다. 노무현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 박종태노동자의 목숨을 끊게 한 이명박살인정권의 운명은 이제 경각에 달렸습니다. 드디어 6월 10일 오늘 또다시 서울은 제2의 6월민중항쟁을 알리는 민중의 투쟁구호로 격동합니다. 의장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투쟁하는 애국민중이 굳게 뭉쳐 의장님과 한 마음으로 우렁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 강희남의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강희남의장님, 투쟁하는 민중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모두가 찾고 있습니다. 흰 도포자락 휘날리며 어서 나타나십시오. 강희남의장님! (「강희남의장님, 항쟁의 마당에 언제나 부활하십시오!」, 조덕원, 2009.6.10)

10) 이명박정권은 5가지 정치적 모순으로 갈수록 심각한 정치위기를 맞고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에 반대하는 반보수세력과의 모순, 과소정책에 반대하는 반과소세력과의 모순, 반북반통일정책에 반대하는 북코리아와의 모순, 오바마미제국주의정권의 대조선정책과의 모순, 한나라당안팎에 존재하는 보수파내에서의 모순이다. 이 모순들은 모두 이명박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긴밀히 상호작용하면서 나날이 동반상승하고 있다. 이중 첫번째 모순은 이명박정권과 본질적으로 연관된 만큼 정권의 붕괴 이전에는 절대로 개량화되거나 위장될 수 없다. (「반이명박전선, 민족민주전선인가 반과소민주전선인가」, 조덕원, 2009.2.28)

분열이 심해지면서 동반상승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지지율이 집권초기에 비해 절반으로 하락해 있는데다 민생 파탄이 심각하고 미디어악법날치기통과, 전직대통령들의 서거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한나라당, 수구보수세력내의 알력과 갈등, 모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북코리아와 이명박정권의 모순은 이명박정권이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반대하고 남북관계를 극단적인 대립상태로 놓는 이상 적대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달리 말해 이명박정권이 대북정책을 완전히 전환할 경우 모순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남과 북의 관계는 조건에 따라 적대에서 화해로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그 상대적 성격을 무시하고 현재의 적대적 모순관계를 절대화시킬 경우 좌편향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한편 남북관계가 적대에서 화해로 전환된다고 하여 바로 남측내의 진보세력과 이명박정권, 민주개혁세력과 이명박정권의 관계도 적대에서 비적대로 전환시키는 것은 우편향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남측내의 모순관계에 남북간의 모순관계가 일정하게 연관되지만 또한 동시에 분명히 구별되는 만큼, 남북관계의 변화에 남측내 관계를 절대적으로 연동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오류가 발생한다.¹¹⁾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는 조건에서 현재 동북아에서 일본과 함께 남코리아의 이명박정권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다. 자칫 6자회담이 핵군축을 명분으로 4자회담으로 축소되어 한국과 일본이 제외되거나 조미양자정치회담으로 중요한 전략적 방향이 설정되는 과정에서 한국(남코리아)이 철저히 소외될 경우 이명박정권은 최악의 정치적, 외교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실체는 예속국이지만 겉으로는 ‘중속적 동맹국’의 관계인 한국에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할 데 대한 정치적 압박을 계속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명박정권이 이러한 대세를 시급히 따라가지 않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다양한 정치적, 정책적 압박 수단들이 등장할 것이고 심하면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민주당정권의 등장과 한국의 김대중-노무현민주당정권의 등장, 부시공화당정권의 등장과 이명박한나라당정권의 등장이 결코 무관하지 않은 만큼 최근 등장한 미국의 오바마민주당정권¹²⁾에 한국의 어떠한 성격의 정권이 조응할 지 주목된다.

11) 1. 빌 클린턴 전미대통령의 방조(訪朝)는 조미관계가 군사적 대결국면에서 외교적 대결국면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는 신호탄이다. 조미정세의 가장 큰 변수가 확정되고 그 윤곽이 그려지면서 남북정세와 남측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해졌다. 조미정세가 긴장에서 완화로 전환되면서 남북정세와 남측정세에 긍정과 부정의 양측면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대체로 긍정을 보지 못하면 좌경, 부정을 보지 못하면 우경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 7. 조미정세는 남북정세, 남측정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뚜렷이 구별된다. 조미정세가 긴장에서 완화로 전환되면 남북정세, 남측정세도 덩달아 이러한 경향을 띠게 되는데, 이럴 때 남측 진보세력과 남측, 해외의 통일애국세력은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조미정세가 완화된다고 반미반전투쟁,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이 없이 코리아의 자주화와 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 상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다. 오히려 지금의 유리한 정세를 십분 활용하여 자주통일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 때이다. ... 9. 북코리아가 조미관계와 북남관계를 갈라보고 있지만 일부러 두 관계를 대립시킬 고정불변의 이유란 없다. 문제의 초점은 이명박정권이 이전정권들이 어렵게 북과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김영삼정권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시킨 데 있다. 더구나 북측의 최고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조선일보와 반북극우파의 극단적인 악선전을 허용하고 부추기면서 북측을 자극한 데 대한 책임도 매우 크다. 이런 정치적인 근본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인도주의적 경제지원정도로는 절대로 북측이 품은 불신은 절대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한 자리에 마주 앉는 것조차 힘들 것이다. (「조미정세의 변화와 진보세력의 과제」, 조덕원, 2009.8.7)

12) 찰머스 존슨은 지난 7일 미국의 정치웹진 톱 디스패치에 보낸 기고문 ‘미국의 운명을 가를 선거(Voting the Fate of the Nation)’에서 오바마가 인종 문제와 지역별 지지 구도를 극복하고 당선되기만 한다면 이번 대선이 민주당의 40년 집권을 가능케 하는 재편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오바마 승리하면 40년 민주당 시대도 가능”」, 프레시안, 2008.10.10)

5. 북코리아의 주동적인 공세와 이명박정권의 불가피한 정책전환

조선(북코리아)은 미국과 남코리아의 예측적 관계와 2009년 정세의 본질을 나름대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올해 대미, 대남 관계를 대략 4단계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단계는 1월에서 3월까지로 새로 출범하는 오바마미정권의 정책전환추이를 살피는 한편 이명박정권을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반통일정권으로 규정하는 준비국면, 2단계는 4월부터 7월까지 인공위성발사, 핵시험, 미사일발사훈련 등 대미 초강력 군사적 공세와 이명박정권을 반통일반민주정권으로 단죄하는 대남 정치적 공세를 벌이는 긴장국면, 3단계는 8월에서 9월까지 클린턴전미대통령의 방조를 계기로 미국의 정책전환을 이루어 오바마대통령의 방조를 추동하고, 현정은현대 이산회장의 방북과 김기남특사조문단의 방남을 통해 이명박대통령의 방북을 추동하는 대화국면, 4단계는 10월에서 12월까지 이명박대통령의 방북과 연이어 오바마대통령의 방조를 실현하며 대남, 대미 관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 절정국면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¹³⁾ 이명박과 오바마의 방북(방조)은 정세변화에 그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도 그 시기까지의 단계적 구분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조선(북코리아)이 올해 미국, 남코리아와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2012년강성대국건설이라는 뚜렷한 목표와 시한을 정해놓고 매우 목적의식적이며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2012년까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그에 걸맞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온세계의 자주화를 이룩하겠다는 조선(북코리아)의 강력한 의지가 대미 군사외교적 공세, 대남 정치공세에서 일관하게 관철되고 있다. 둘째,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공세를 펴고 있다. 미국을 향한 군사적 공세도 인공위성발사와 핵시험, 미사일발사훈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남측을 상대로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서해교전재발을 경고하는 등 초강력 압박수단을 사용하였다. 셋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오바마정권이 출범한 바로 그해에 클린턴의 방조를 이루어내고 오바마의 방조를 추진하는 한편 이명박정권의 퇴진구호에서 이명박대통령의 방북까지의 전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조선(북코리아)은 2009년 한해동안 2012년 강성대국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센 동력, 가장 빠른 속도로 대미, 대남 공세를 펼치고 있다.

조선이 미국과의 관계를 클린턴의 방조를 통해 결정적으로 전환시켜 놓은 조건에서 미국의 조선에 대한 정책전환과 발맞추어 남코리아의 북코리아에 대한 정책전환은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 만약 남코리아가 이러한 코리안반도의 정세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이명박정권은 동북아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한미관계가 악화되어 그 정치적 위기가 극도로 심화되어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지게 된다. 그러나 미국이 통조봉한(通朝封韓)¹⁴⁾ 곧 조선과 수교하고 한국내 반통일세력을 고립시키는 전략적인 정책전환을 결심한 조건에서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전환은 그 방법과 시간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대중전대통령의 서거정국이 형성되고 북코리아가 곧바로 고위급 특사조문단을 보내 이명박대통령을 예방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놓음으로써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전환이

13)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오는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데 이어 아시아지역국가들을 순방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13일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대통령이 오는 11월 14~15일 개최되는 APEC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은 이 지역방문기간에 다른 국가들도 방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대통령의 첫 한국방문이 APEC 회담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11월 APEC 참석 … 이시아국 순방”」, 연합뉴스, 2009.8.14)

14) 조미정세의 변화는 일정하게 남북정세의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 조미정세가 평화공존으로 바뀌는데 남북정세가 일촉즉발로 치달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속적 동맹국가’인 남코리아의 대북정책을 조미정세의 변화에 맞게 전환하라고 강제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코리아가 미국과 수교하고 남코리아를 고립시키는 ‘통미봉남’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코리아와 수교하고 남코리아내 반북호전세력을 고립시키는 ‘통북봉남’ 정책을 쓰게 되었다. (「조미정세의 변화와 진보세력의 과제」, 조덕원, 2009.8.7)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북코리아특사조문단을 만난 정세현 전통일부장관이자 김대중평화센터부이사장이 이제는 이명박정권이 특사를 방북시킬 차례라고 한 말에 바로 정세변화의 요점이 있다.¹⁵⁾ 이명박정권이 반통일보수세력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지만, 미국의 정책전환이 명확해지고 오바마의 아시아순방의 일정이 11월로 확정된 조건에서 특사 또는 대통령의 방북시기가 임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방북하여 3차 남북수뇌회담이 이루어지면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계승하며 보다 구체화되는 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¹⁶⁾ 그리하여 남북은 통일운동의 새로운 추동력을 얻게 될 것이고 이 힘은 조미관계의 근본적 개선이 임박한 만큼 이전과 비교해 훨씬 강력할 것이다. 남코리아내의 반통일보수세력의 준동이 아무리 심각해도 코리아반도의 통일대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으며 반통일보수세력의 고립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가 제안한 정당단체정치협상회의가 우선적으로 실현되어 우리민족의 힘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장을 펼쳐야 할 때이다.¹⁷⁾ 바야흐로 코리아의 자주와 통일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15) 정세현전통일부장관(김대중평화센터부이사장)이 24일 “이제는 우리가 북에 특사를 보낼 차례다”라고 말했다. 정전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시사프로에 출연해 이 같이 강조했다. 정전장관은 “고김대중대통령빈소에서 조문을 함으로써 북조문단의 역할은 끝났고, 하루쯤 기다렸다가 청와대를 예방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특사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북한에서 특사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정부가 결심을 한다면 특사를 보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우리가 북에 특사 보낼 차례” , 오마이뉴스, 2009.8.24)

16) 이대통령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회의 설치와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개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고위급회의 설치의 경우 지난해 4월 미국방문 당시 제안한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함께 임기중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간 대화에 언제라도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대북 5대개발프로젝트는 지난 대선기간 대북 포괄적 패키지 차원에서 내용은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이와 관련한 후속대책 마련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함께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북핵문제가 이미 남북의 양자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재래식무기는 남북 당사자간 해결책을 내용으로써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8.15 64주년’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시’ , 연합뉴스, 2009.8.15)

이대통령은 ... 북한 지역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와 연300만달러이상 수출가능한 100개 기업 육성, 경제·금융·기술 전문인력 30만명 양성, 북한판 KDI(한국개발연구원) 및 KAIST(한국과학기술원) 설립 지원, 400억달러상당의 국제협력 자금 조성,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등을 약속했다. 휴전선비무장지대내 한강하구퇴적지위에 약 30만km²(여의도의 10배)의 섬을 만들어 남북경제교류의 장소로 만들자는 ‘나들섬구상’도 내놨었다. (「이대통령, 한반도평화체제 위한 폭넓은 대북 제안’ , 한국경제신문, 2009.8.14)

17) 민주노동당은 이명박정부가 하루속히 대결과 대립을 버리고 대화와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을 제안합니다. 우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10.4에 즈음하여 남북정치회담 개최를 제안합니다. 지난 1948년, 단독정부수립을 막기 위해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열었던 것처럼 남북정치단체대표자들을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파국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회담을 10.4에 즈음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8.15를 기점으로 남북정치회담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6.15공동위원회가 정치회담을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정치회담은 평화통일의 이행 방안을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 민족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8.15를 즈음한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 기자회견문’ , 민주노동당, 2009.8.14)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는 14일 8.15 광복절 64주년을 맞아 “10.4 남북공동선언을 맞아 남측과 북측의 정치단체 대표들과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남북정치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강기갑대표는 “지난 1948년 단독정부수립을 막기 위해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열었던 것처럼 남북정치단체대표자들을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파국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회담을 10.4에 즈음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8.15를 기점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대표는 이와 함께 △추석을 즈음해 중단되었던 이산가족의 상봉 재개 △인도적 쌀, 비료 대북지원 법제화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을 해결해야 한

다고 제기했다. (「강기갑대표 “남북정치회담 개최하자”」, 프로그레시브, 2009.8.14)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 실현을 주도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의 주체로서 평화실현의 활로를 주도적으로 열어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 비핵지대화와 평화 선언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발전과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지역 참관지 제한 해체,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 NLL 문제 해결을 통해 근본적 압초를 제거해야 한다.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6자 회담 참가국에게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 실현을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되며, 모처럼 조성된 호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민주노동당 문성현대표 기자회견문」, 민주노동당, 2007.7.16)

민주노동당 권영길대선후보는 5일 2007공동선언에 대해 평가하면서 초당적이고 초정파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범국민추진위원회(가칭)구성을 제안했다. 권후보는 또 2007공동선언에 명기된 남북관계발전에 장애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제거와 남북국회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기구 수립과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북국회교류 활성화를 위한 5당원내대표회담'도 함께 제안했다. 권후보는 이어 “민주노동당과 교류중인 조선사회민주당을 통해 북측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방북추진의사를 밝혔다. 권후보는 자신의 방북이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주년준비위원회'구성과 선언문에 언급된 남북국회교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길, “남북정당단체연석회의 위해 방북하겠다”」, 프로그레시브, 2007.10.6)

코리아의 남북관계 : 교착상태의 출구를 위해 남북문제의 국제화에 저항해야 하는가?

파트릭 쾨츠망(Patrik Kuenzenman) |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 사무총장

<차례>

1. 남측 입장에서의 남북화해 : 국제정치적 문제
2. 북측 입장에서의 남북화해 :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1998년에서 2008년까지 10년간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후 2008년 2월 새로 들어선 보수정권은 이전 정권들의 ‘햇볕정책’에 대해 남북관계의 ‘상호성’을 들먹이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햇볕정책’을 입안한 김대중전대통령이 2009년 8월 서거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북코리아)의 특사 조문단이 서울에 도착했다. 그 이전까지 2008년, 2009년 남북관계는 계속 하강하는 상황이었다.

북코리아 특사조문단은 이 자리를 통해 이명박대통령을 만나는 기회를 마련했다. 청와대는 18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 만남이 ‘매우 진지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청와대관계자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패러다임이란 어떤 세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 세계의 논리정연한 모델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남북관계의 전망이 코리아반도의 분단된 양측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9년 8월의 만남 이전, 남북 당국이 각각 가지고 있는 전망을 주목해야 한다.

1. 남측 입장에서의 남북화해 : 국제정치적 문제

2008년 2월 이명박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전임대통령이 이루어놓은 남북화해의 전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취임했다. 남북화해의 원칙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속에 잘 요약되어 있으며 2007년 10.4공동선언(북과 남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의 첫번째 조항에서 재확인되었다.

이명박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비핵개방3000’이란 계획을 주창했다. 이명박대통령이 시도하는 이 ‘비핵개방3000’이란 슬로건은 북측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는 결단을 한다면 10년내에 북코리아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측정부로서는 이 ‘비핵개방3000’이란 슬로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먼저 핵문제는 북측정부 내부의 문제일뿐이고 남북공동선언의 어떤 부분에서도 핵

문제를 언급한 사실은 없기 때문이다.

남측정부는 이 '비핵개방3000'을 작성한 현인택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사실 이명박대통령은 현인택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통일부장관이란 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려 했었다. 그렇게 남북문제를 외교부소속문제로 정의하고자 했지만 이명박대통령은 여론의 반대로 한발자국 후퇴하여 통일부를 그대로 존속했다. 그러나 현인택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한 사실을 보면, 새 정부는 남북관계를 단순한 외교관계로 보고자 하는 의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이번 64주년을 맞은 8.15경축사에서 남북 양국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고위급회담'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명박대통령은 북측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는 경우에 국제사회가 북측을 도울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처럼 남북화해를 국제화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민족끼리'라고 표시한 원칙에 어긋난다. 반면 남북화해의 국제화는 부시정권 이래 남북화해에 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의도에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시정권의 태도는 내정간섭이라고까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2004년 남북간 육로와 철로 재건을 위해 비무장지대의 지뢰밭을 부분적으로 제거해야 했을 때 미대통령 조지 부시의 동의를 얻기 위해 김대중전대통령의 개인적인 개입이 필요했었다.

곧이어 워싱턴은 개성의 특수경제공단 개발을 반대했었는데 그 이유는 개성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판매금지된 물품으로 정해졌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개성의 생산품들은 미국과 한국(남코리아) 간의 자유무역협정영역에서 제외되었다. 통신장비반입에 대한 원칙조차도 미상무부의 간섭을 받는 대상이 되었고 2005년 11월 16일 남코리아의 한국통신(KT통신)만이 개성과 서울 사이의 전화선을 설치하도록 허락됐다.

또 미정부는 인권이란 명분을 이용했다. 즉 2006년 1분기에 부시대통령에 의해 대북인권담당 미국대표로 임명된 신보수주의자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가 개성의 북코리아노동자들의 노동조건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조선(북코리아)정권을 바꿔보자는 속셈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미의회가 쿠바에 대한 소위 '비정부'기구를 자처하는 단체들과 국제적 회의, 라디오선전방송들을 위해 약 2400만유로를 사용하도록 결정한 것과 같다.

2005년 9월 노무현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개성경제특구의 개발을 반대하는 워싱턴의 일관된 입장에 대한 지적으로, 동맹국인 미국의 '제국주의적 경향에 대해 비난했다.

미국은 남북경제협력을 방해하면서 코리아의 통일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코리아가 통일되면 통일된 코리아는 또 하나의 강대국이 될 것이 분명했고, 그로 인해 미국의 미래 전략적 상대로 이미 인정되고 있는 중국을 포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코리아주둔미군의 유지가 문제시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2008년 2월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으로 남코리아에 그들의 정책을 위한 강한 중계지를 얻게 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남코리아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명박정권이 전임정권들, 즉 김대중과 노무현이 어느 순간에 그러했던 것처럼, 기존 미국의 동북아전략을 거스를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 북측 입장에서의 남북화해 :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북측은 남북관계를 조선(북코리아)과 미국간 핵문제와 같은 국제적 차원의 문제와는 달리 코리아민족 내부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북측은 이명박정권이 2008년 2월 취임후 기간의 남북화해 성과를 여러각도에서 무위로 돌리려 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2008년 7월 11일 군사지대를 침입해 북측군인이 총을 발사해 일어난 남측관광객의 죽음은 남측정부가 금강산관광을 중지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1998년에 현대아산그룹에 의해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남북화해를 가장 잘

상징하는 계획이었다. 남측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중단함으로써, 7월 11일의 비극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 그 해결방안을 찾는 것보다 북측을 응징하고 싶어 했다.

북측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남북경계의 통행을 제한했다. 그리고 2009년 1월 30일 북코리아는 서울의 정부가 채택한 새로운 노선에 대해 '남북관계는 더이상 가능할 수도 없고 개선할 수도 없고 희망할 수도 없는 난관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코리아는 새로운 이명박정부의 대결정책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 선언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없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깨달았으며, 이명박정부의 대결정책이 남북간 모든 선언, 특히 남북간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을 종료한다는 선언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남북관계 악화는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중단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현대그룹의 현정은회장이 2009년 3월부터 북측정부에 적대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개성에 억류된 남측직원을 석방시키기 위해 북을 방문하기 전까지, 현대아산에 의해 개발된 개성특수경제공단만이 1998년에서 2008년까지 만들어진 남북화해의 표시로 몇달동안 유일하게 남아있었다.

현정은회장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만난 2009년 8월 16일, 남측 현대그룹과 남측과의 교류업무를 위한 북코리아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남북상호교류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일치를 보게 되었다.

- 개성과 금강산에서 중단된 관광 재개
- 백두산 관광 개시
- 남북 사이에 통행절차 완화
- 이산가족상봉

북측정부와 남측기업 간의 이러한 회담은 남북정부간 소통이 거의 단절된 상황과 매우 대비된다. 한편 오히려 '우리민족끼리'라고 선언했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일치한다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위와 같은 사항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측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하는데, 남측정부가 승인을 하게 되면 남측의 패러다임이 정말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8월 23일 이명박대통령이 북측 특사조문단을 만나고 있을 때, 미국 대조선제재조정관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가 서울에 도착했다. 미국조정관의 서울방문은 남측에 확실한 신호를 줬다. 서울은 평양과의 관계가 국제사회가 부과한 제재, 특히 2009년 5월 25일 북코리아의 핵시험 시행에 따라 채택된 유엔안보리결의안 1874호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의안 1874호 2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유엔회원국가들은 금융지원이 북코리아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다른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북코리아에 대해 국제무역을 통한 공적 재정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화해와 조선핵문제 사이에 성립되는 이 관계는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의 정신에 위반된다. 남측정부는 북측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2003년 부시정부에 의해 제안되고 특히 북코리아의 선박을 감시할 수 있는)에 참여하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부인하였다.

1998년과 2008년 사이에 남북대화가 조선핵문제, 특히 2006년의 첫번째 핵실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북코리아의 입장에서 북코리아의 핵프로그램은 남코리아에 3만명, 일본에 5만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극동에 다양한 해군과 공군을 지니고 있는 초강력 핵보유국가인 미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이다. 때문에 핵문제는 조미관계의 문제이지 남북관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남코리아에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남측정부가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을 존중하여 2008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북코리아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은 핵문제와 남북화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의 성립을 의미한다. 코리아양측이 공식적으로 조선핵문제를 논의했던, 6자회담(조선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조선(북코리아)이 철수한 후, 6자회담은 불가능하다. 특히 조선과 미국간의 양자회담이 성사되면 더욱 그렇다. 미국은 6자회담의 다자화를 선호하면서 이러한 양자대화를 반대한다.

그러나 조선(북코리아)이 원하는 이 양자회담은 코리아반도의 안전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신속적으로 해결해줄 것이었다. 예를 들면 1953년의 휴전협정을 진정한 평화조약으로 대체한다. 감히 말하건대, 오바마정부가 항상 표현하고 있는 조미양자직접회담의 거절은, 비정상적이고(‘적과 협상하지 않는다’) 게다가 시대착오적이다. 미국정부는, 결국 일본의 역사적 정권교체과 미일관계의 수정 가능성의 영향으로, 빨리 변화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되면 남측정부는 북의 핵문제라는 구실을 버리고 과거의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코리아 양측 사이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와 분단

파트릭 모취스(Patrick Maurus) | 동양어대학(INALCO) 교수, ActesSud출판사 한국문학컬렉션 책임자

<차례>

1. 역사적 개괄
2. 국제적 측면
3. 결론

분단으로 남북관계를 접근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분단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상황이 모든 것을 설명하게 하며 그에 따라 다양한 전후관계들이 단순한 이념적 설명에 그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두 체제가 분단에 관한 담론을 통제하려 했으므로 이러한 분단상황만을 통해 남북관계를 고찰하려는 시도는 더더욱 위험하다. 헨리 엠(Henry Em)은 이 현상을 남코리아에서 1980년까지 대학에서 현대사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일례를 통해 잘 분석하고 있다.

냉전, 외세에 의한 전쟁, 외세 침략, 사악한 미국인, 끔찍한 소련인, 고의적인 중국 등 이 모든 것이 지나갔다. 모든 현상들은 필연적으로 거짓은 아니었지만 너무나 편파적이어서 거짓에 인접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핵심은 어느 한 체제나 한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지 '분단'을 이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코리아문제에는 진정한 냉전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변화를 가로막고 있었다. 때문에 제대로 된 분단 담론을 찾는 것은 분명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베트남전쟁이 어떤 의미에서 코리아전쟁을 연상시켜 이데올로기적 해석을 부과했다는 사실 또한 빼 수 없다.

게다가 제반현상들은 단지 정부와 선전기관들만이 마련한 것이 아니다. 프랑스인들이 놀랄 만한 예를 들자면, 좌파비평가 백낙청이 1980년대 남코리아 문학을 분석하는 기사에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참여(양가주망)」라는 어울리지 않는 제목의 글로, 분단극복을 위한 비전과 해결안을 얼마나 잘 제시하는가로 문학을 평가해야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이 되는 식의 자의성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관계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분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베트남, 독일, 예멘이 통일되었다. 이들은 코리아통일에 일례(一例)만큼이나 반례(反例)를 제공한다. 코리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들이 그렇게 통일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둘로 나뉜 곳이다. 필자는 비록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 상황이 전제할 수 있는 수많은 고통을 막연하게 예감할 수 있다. 몇번의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재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가족들이 헤어져서 남아있다. 그렇지만 김대중전대통령 국장기간 취해진 남북간 접촉과 이에 이은 남북적십자 이산가족상봉 절차 재개를 주지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1. 역사적 개괄

1905년부터 악독한 일본(일본과시스트들이 갖가지 의학생체실험을 행한 하얼빈수용소를 방문해 볼 것) 식민지 하의 코리아는 1945년 미국과 소련 군대에 의해 해방되기 전부터 필연적으로 모순적인 움직임들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항일운동가들은 순식간에 제압되거나 북쪽, 심지어 만주로 올라가 지하활동을 계속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군대에 들어가 투쟁하였고 심지어 군내부에서 그들끼리 싸우기도 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제국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코리아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나뉘어졌다고 할 수 있다. 75년 뒤 그 어떤 ‘코리아역사’도 이 시기와 반일제국주의투쟁가들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해방시기 광복의 감격 이외에 코리아는 실질적 독립의 부재라는 새로운 문제를 물려받은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38선에 의한 임시분단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굳건해졌다. 이 분단상황에서 하나의 국가를 지칭하는데 두가지 이름 사이의 선택-‘한국(남코리아)’이나 ‘조선(북코리아)’이나의 문제가 최소한의 표명이 아닌 게 되어 버린다.

유엔(UN)의 비호 아래 이루어진 미국의 책략은 남코리아 대통령 이승만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취하도록 만들었고, 공산주의자뿐 아니라 조선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우파 - 김구암살사건은 이 시기에 화해와 통일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 에 대해서도 가해진 가혹한 탄압과 관련되어 있는 대립적 정국을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정국은 1950년 6월 25일에 내전이라는 군사적 국면이 개시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사료편찬은 역사의 일부이며, 역사적 담론에 대한 지배는 정치적 논쟁의 구성요소다. 누가 이 전쟁을 시작했는지의 문제(이는 자동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자를 ‘유죄’로 만든다. 예를 들어, 엄밀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나치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은 프랑스와 영국이었다.)에 대해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나 다른 이들의 연구가 보여주는 바는 이 전쟁이 내전이었고, 누구도 이 내전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53년의 휴전 이래, 코리아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단순한 군사적 도발시기와 공공연한 위기시기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말이다. 남코리아에서의 미국의 핵무장, 판문점도끼사건, 군사적 술책, 푸에블로(Pueblo)호 사건, 비무장지대 침범, 땅굴, 지속적인 도발, 군사적 책략 등 ...

코리아인들, 특히 일반시민들은 비무장지대로 칭해지는 이 선을 사실상 결코 넘어갈 수 없다. 심지어 평양에서 호텔을 잡기도 어려울 정도다. 점점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남코리아 기업인들조차 말이다.

우리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이 두 ‘국가’, 두 체제, 두 민중이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더이상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대답은 - 물론 중요하지만 -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실 남코리아에서 통일이 논의의 주제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정당이 그들의 강령 속에 그러한 문제를 고시할 수밖에 없다면 사람들은 환멸을 느낄 것이다. 통일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앞에서 오늘날 남코리아인들의 대다수는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들은 북코리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상관없다고 느끼며 통일에 소요될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만 걱정한다.

나는 이와 같은 진술들을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건이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진척이 있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민족적 감정(그리고 민족주의)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적 중대사 앞에서 중요성을 잃는 회계적 계산들을 일소해버리면서 말이다. 분단상태에서 모순적이고 불완전한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특히 젊은세대에게 흔히 발견된다.

프랑스가 분단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서는 북코리아와 프랑스의 대화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처음에 북코리아가 프랑스를 우선적으로 인정했다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과는 반대로 대사관 개설을 거부당하자 이를 뒤로 제쳐놓게 되었는데 이는 프랑스가 취한 입장에 따른 것이다. 공식적으로 유엔을 대표하는 나라로서, 피노체트(Pinochet)와의 관계를 성사시키기도 했는데 한 정부를 인정하는 것과 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 사이의 논리적 변별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그리고 북코리아가 이해할 만한 태도를 취할 때 북코리아를 인정하겠다는 식의 소소한 협박은 프랑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시기 독일은 좋은 수를 두고 있다.

이제 거의 일상적으로 협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반복에 대해 말해보자. 가장 단순하게는 두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겠다. 남코리아에서 이 문제는 꽤 간단한 것이다. 남코리아의 경제적 성공은 일종의 정당화로서 작용한다. 우리는 그에 따라 항상 코리아전쟁과 분단 및 남북코리아 정부 수립의 원인을 재정립할 수 있다. 현 상황은 소위 경제적 우위가 남코리아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것처럼 돼버렸다. 경제적으로 옳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옳다는 식이다. 이러한 입장은 여러 관점들을 거부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이지만 항상 남코리아의 공식 채널이 말하는 모든 것의 근거를 제공한다. 남코리아체제의 합법성이 공허하다는 점은 위의 남코리아의 공식입장이 공허한 만큼이나 의미심장하다. 식민지시기와 해방시기의 분석이 어떠한 간에 남코리아의 존재는 독재자 이승만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의 지지도도 불구하고 거리로 쫓겨났다. 법이 쫓아낸 자에 의해 세워진 정부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의 결론, 진짜 코리아는 남코리아이며, 북코리아는 비정상(또는 우연한 사고이거나 사라져버릴 마지막 스탈린체제 등)이라는 이런 식의 극히 미국식의 입장은 여러 공산주의나 북코리아를 위협인자로 조장한다. 비정상적인 체제, 역사에 의해 필연적으로 비이성적, 망상적, 정신분열적, 기괴하고 부조리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지구를 폭파할 미치광이 김정일'이라는 반복적 이미지는 여기에서 비롯한다.

이것은 꽤 패권주의적 견해이지만, 낙인이 찍힌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반작용을 유발한다. 북코리아에 반하는 이런 식의 냉전담론이 비난받을 정부의 의도적 행위라면, 북코리아에 대한 일련의 분석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는 이 분석을 취하지 않았으나 흔적이 남아 있다. 확실히 그들의 유효정책이 부분적으로 실패하였지만 최소한 이들 정부들은 대결국면전략이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북코리아와 침략의 위험 없이 대화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많은 이들이 북코리아의 비이성성을 믿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북코리아는 코리아의 반쪽이며, 통일은 남북 모두의 임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코리아의 불운이란 둘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국제사회에서 전쟁하기 위한 한 나라, 혹은 해결책을 찾는 시늉을 하는 6개국은 있어도 결코 남북 두 당사자만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 국제적 측면

처음부터 외세문제는 코리아문제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점이 유일하게 역사가들과 전문가들이 합의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밝히는 것인 한, 의견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브루스 커밍스 외 다른 이들과 의견을 같이 하여, 필자는 분단의 근원이 식민지시기(1905~1945)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이 시기는 코리아의 역사와 분단에 대한 이해(지배자와의 협력구조에 대한 심화연구와 남코리아 자본주의의 식민지적 기원 분석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에 있어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코리아인접국들의 침략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한 중요하다.

이 역사로 인해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다른 코리아 고유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코리아인들에게 내정간섭으로 작용하는 (중국 이외의 또다른) 외국세력들이 출현하였다. 이 외세는 공적 담론 이외에는 거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군과 (소비에트연방 이전의)러시아군,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군과 미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외국세력은 일반적으로 코리아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단의 지속기간 자체도 이 내정간섭의 명백한 증거이다. 외세가 없었더라면 현

재 코리아는 북코리아든 남코리아든 이데올로기적으로 하나일 것이다.

6차회담, 정확히 말해 코리아를 둘러싼 4개국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들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진정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그들 각자의 특수한 이익을 보호하려 하는가? 필자는 그들 모두가 호의를 품고 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이젠 세계 역사의 유일한 사건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코리아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어느 날 불안을 일시적으로 없애줄 (다음날이면 모욕적일)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상반되는 이 순간 모든 실리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인접국들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자신들의 아젠다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장황한 아젠다는 중국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일은 누구도 매도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다. 이것이 아마도 중화를 과신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점차 부과되는 사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낙관론만큼이나 비관론의 증거가 되는 요소들이 많다. 미국 부시정부 8년은 상황을 악화하고 이미 과도하게 퍼진 불신을 주입하는 데 쓰였다. 현 한국(남코리아)정부와 일본정부는 이런 점에서 주변의 비관주의와 확연히 다른 첫번째 혁신정부인 오바바정부의 진가를 알아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덜 참여적이고 모욕적이기 그지없는 또다른 진술들(이는 때때로 미정부 부처 사무국들을 지배하는 극단적인 교양의 부채를 보여준다)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내가 아는 한 처음으로 해결 방안, 이른바 ‘포괄적 패키지’를 제시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조선의 핵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위한 압박이 더 필요하다면, 기간의 여러가지 압박이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함을 역사가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에, 조선에 총체적인 정치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미국 무부가 이렇게 영리하고 심도있는 교섭안을 도출한 것은 처음이다. 해결책은 분명 정치적이고 전면적일 것이다.

조선은 이 정치적 타개점이 미국이 아니라 코리아의 관점에서 나와야 한다고 확신하기에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코리아분단에 충분히 책임이 있는 미국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잘못된 것을 코리아에 주어서는 안된다. 물론 조선은 미국(빌클린턴 환대, 두 기자 석방)과 남코리아(고 김대중대통령 특사조문단 파견), 그리고 국제사회(우리를 제대로 대접하면 상황은 해결된다)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열의를 보이고 있다.

연구하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내놓기 바쁜 분석가들은 코리아가 사대주의라 부르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비싼 값을 치른 사실을 잊고 있거나 모르는 것 같다. 코리아에서 최소한 1500년은 뒤틀린 유교에 기반한 중화주의를 설명하는 데 쓰인 이 개념은, 무정부주의자 시기의 신채호에 의하면, 외국과의 관계에 총체적으로 퍼져 있었다.

시간에 따라 민주주의나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모든 체제와 사상은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관점은, 코리아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존재하는데, ‘코리아의 모든 불행은 이 흐름을 가로막는 외세 개입에서 유래한다’는 생각과 확고하게 연결돼 있다. 이러한 태도를 설명하기에 ‘민족자주’라는 말로 충분치 않더라도, 내가 보기에 강대국과 그 외 모든 외세개입을 거부한 코리아는 흥미로운 분석대상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필자가 설정한 가정이 나온다. 남코리아와 북코리아에 서로 다른 정도로 존재하는 자주성, 그것은 수정된 사회진화론의 한 형태이다. 여기서 나치의 출현에 계기가 된 서구이데올로기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지난 세기초 근대민족주의자들을 결집한 극동아시아 버전을 말하고자 함이다.

국제정세에서 그 무엇도 고정된 것은 없다. 오늘의 지배민족이 내일의 피지배민족이 될 수 있고, 곤란에 처한 민족이 이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신념이 그것이다.

이들 앞에는 1860년 붕괴한 중국과 1905년 이래 최강대국이 된 일본의 예가 있음을 잊지 말자. 아시아에서 일어난 권력의 불확실한 게임은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론을 지지하는 데 쓰였다. 그러나 부조리와 설명 불가능한 요소들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하나의 설명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음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남북관계는 존재하는가? 필자는 답을 제시하는 대신 4가지 언급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은밀히 진행되는 일종의 통일이 존재한다. 침공이나 매입 시도 이후 시대는 어떤 외세에도 흔들리지 않을 복잡다단한 초소형 다중 남북관계가 정립되고 있다.

둘째, 이론의 여지없이 조선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는 필자를 용서하기 바란다. 인민들의 권리가 워싱턴이나 TF1(프랑스방송)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다는 말이다. 내가 만약 김일성주석의 서거이후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라크전쟁이라고 한다면 흑자는 놀랄 것이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끼어든 미국 부시는 조선이 여러해동안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헛되이 같은 태도만 견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 국가에 대한 공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구실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조선의 체제 붕괴와 미국화된 남코리아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무엇이겠는가?

셋째, 조선은 진보하고 있다. 필립 폰즈나 이날코(INALCO)의 코리아연구센터 협력자들 등의 증언은 셀 수 없이 많다.

넷째, 누가 통일을 바라는가? 이에 대해 길게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적으로 생각해보자. 남코리아사업가들은 일정한 형식의 통일을 바란다. 지정학적 고찰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들, 숙련된 북코리아 인민들의 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남코리아 사람들 역시 통일을 바란다.

3. 결론

남북관계 및 조선(예를 들어 쿠바)과 강대국간의 관계는 협박의 문화로 각인되어 있다. 만약 조선이 이에 굴하지 않는다면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협박을 사용하는 이들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실행할 만한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제3자들과 인민들이 국제분쟁을 부당하게 좌지우지하는 방식에 맞설 수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일이다.

- 토론녹취록 -

남북정세 분석과 전망

발표 : 파트릭 쾨즈망(Patrik Kuenzemman)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 사무총장
 파트릭 모휘스(Patrick Maurus) 동양어대학(INALCO) 교수
 사회 : 조덕원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조덕원 : 그럼 질문과 토론시간으로 넘어가겠다. 간단하게 해주면 감사하겠다. 준비하는 동안 파트릭 쾨즈망에게 질문하겠다. 클린턴이 조선에 갔고 다음으로 오바마의 방조가 기대된다. 이명박의 방북이나 오바마 방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시기나 토론의제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한다.

쾨즈망 : 먼저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드디어 미국이 조선과의 직접 회담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미국은 양국의 직접대화를 통해 조선을 다시 6자회담에 복귀시키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평양에서 양국간 직접대화가 거의 이뤄질 것이라 전망한다. 그리고 조만간 미국측 실무담당자들이 조선을 방문해서 직접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관점에서는 조선과 직접대화를 한다면 그 결과가 있어야 한다. 미국으로서 직접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는 조선을 다시 6자회담테이블에 끌어앉히려는 것이다. 모두 다 알다시피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직후 조선이 6자회담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다. 조만간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할 경우에 그렇다면 조선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줄지, 아니면 또 다시 대립할 것 인지는 조만간 조선이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오바마대통령의 조선방문은 현재 미국과 조선간의 여러 복잡한 정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하면 나는 앞으로의 회담의 결과나 대통령방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조선을 방문한 클린턴은 전직대통령이고, 현국무장관의 남편이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내가 듣기로는 클린턴국무장관이 지금까지 미국이 전혀 제시하지 않았던, 말하자면 패키지를 제안했다. 패키지정책이 뭐냐면 그동안에 조미간 여러 작은 긴장관계가 많았는데, 그런 사소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에 패키지로 묶어서 해결을 하자는 것이다. 긴장국면에 들어선지 60년만에 처음으로, 조선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하면서 내놓은 정책이 패키지정책이다. 이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덕원 : 그동안 두분이 남과 북을 다녀온 소감과 정말 통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걸릴지 한마디씩만 말해 달라.

모휘스 : 내 생각에는 북코리아나 남코리아나 99% 다 똑같다. 내가 보기엔 내가 만난 남코리아사람들은 북코리아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놀란다. 여태까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민족이고 사람이라 굉장히 놀라는 것을 많이 봤다. 거기다가 똑같이 양쪽에 민족주의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코리아민족간의 특별한, 아주 특별한 감수성. 소주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 기타 등등 문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 코리아말에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외국인으로서 코리아인들 앞에 코리아인에 대해 말하는 게 굉장히 우스운 것 같다. 그

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두번째 중요한 문제는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내가 2년전부터 조선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지금 현재 조선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06~2007년까지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경제발전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조선에서 그동안 천재지변 등으로 국가경제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조선주민 20%가 굉장히 열악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한테는 국가라는 의미가 별로 없다. 너무 소외 돼있고 어렵게 살고 있다. 현재 이것이 조선의 가장 큰 문제인 거 같다.

켄즈망 : 모휘스교수의 발언에 한가지 추가하자면 남은 잘 모르지만 북은 많이 갔다 와서 좀 안다. 북의 큰 문제는 지금 평양이 가장 국제적인 도시인데 경제상황이 참 안좋다. 예를 들면 평양백화점에 전기가 자주 나가는 등 에너지문제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느낀 바에 의하면 평양의 주민들 삶을 보니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 같다. 중산층도 생긴 것 같고 그런 것을 목격했다. 첨단산업문제에서도 발전을 많이 해서 이동통신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내가 조선사람들한테 가장 놀리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경에 대한 과감한 돌파력,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감사하다.

조덕원 : 모휘스교수는 이청준문학작품을 원역하고 있다.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 파트릭 켄즈망 사무총장은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직접적이고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 코리아통일과 코리아프랑스친선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두분의 발표와 참석에 대해서 깊이 감사한다. 큰 박수 부탁한다. <끝>